



주간 통일정세

2013-1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北 김정은, 사흘째 군부대 시찰...전투장비 점검(종합)(3/2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흘째 군부대를 시찰하고 인민군의 각종 사업 현장을 찾는 등 활발한 군 현지지도 행보를 계속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보도함.
- 미체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1501군부대를 찾아 이 부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첨단전투기술기재’를 점검했다고 전함.
- 이날 김 제1위원장이 방문한 부대는 작년 5월 23일에도 찾은 적이 있으며, 당시 그는 이 부대가 제작한 전투기술기재를 살펴본 뒤 “싸움 준비에 필요한 현대적인 기재들을 만들었다”고 치하하며 첨단전투기술기재를 연구·개발하도록 지시함.

●北, 동해서 육·해군 합동훈련...김정은 참관(종합)(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5일 동해안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육·해군 합동으로 대규모 상륙 및 상륙저지 훈련을 실시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북한은 이날까지 나흘째 김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훈련을 지도한 사실을 거의 실시간 공개해 주목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날 동해에서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와 제287대연합부대, 해군 제597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反)상륙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함.

●北, 당 중앙위 전원회의 예고... “중대문제 결정” (종합2보)(3/2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중대 문제’를 논의, 결정키로 했으며, 27일 “당 중앙위 정치국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26일 발표하고 전원회의를 3월 말에 소집키로 했다”고 보도함.
- 당 중앙위 정치국은 이 결정서에서 회의 개최 이유를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北 김정은, 軍선전간부회의 참석...사상 무장 독려(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군 선전일꾼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군 선전일꾼은 북한군에서 사상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를 가리키며 이날 회의에는 군중, 군단 정치위원,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케트(미사일)군, 각급 군사학교 등의 선전 간부들이 참가함.
- 김 제1위원장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전군선전일꾼회의를 조직한 것은 사상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 전면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흔들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과시”라고 말함.

●北 김정은, ‘남한물 든’ 군간부 복직 지시(3/29, 마이니치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른바 ‘남한물’이 들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조선인민군 간부를 ‘온정 정치’ 차원에서 복직하도록 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함.
- 신문은 북·중 무역 종사자의 전언을 토대로 쓴 베이징(北京)발 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남조선의 영향을 받아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임된 뒤 조사를 받아온 인민무력부 기관지 ‘조선인민군’의 김모 편집국장에게 대해 ‘1%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며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함.
- 김 편집국장은 이에 따라 지난 1월께 업무에 복귀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함.

●北 김정은, 작전회의 긴급소집… “미사일 사격대기” 지시(종합)(3/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이 심야에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북한 언론매체가 신속히 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그는 긴급회의에서 “아군전략로케트(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미사일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北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 대규모 군민대회(3/2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9일 미국과 남한을 위협하는 내용의 군(軍) 최고사령부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대회를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최고사령부가 지난 26일 전략미사일 부대와 야전 포병군의 ‘1호전투군



무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실제적 군사적 행동을 과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이를 지지하는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리기는 처음으로 앞으로 각 지방에서도 군중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임.

-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간부, 군인, 학생, 근로자들이 참석했고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최고사령부 성명을 낭독함.

●北 黨중앙위 전원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종합)(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며 “(이 노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 노선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이 구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함.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 평양시 軍民대회, 3.29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3.29, 중방)
- 김영남, 최영림,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양건, 곽범기, 문경덕, 노두철, 리일환 등 참석
- 최영림(내각총리), 平北 양책베아링공장·룡천군 장산협동농장 등 현지요해(3.29, 중통)
- 北, 3.31 ‘黨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과업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 및 조직문제에 대한 의정들을 상정하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3.31, 중통·중·평방)
- 전원회의는 구체적 과업으로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집중을 통한 단기간 내 인민생활 안정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개발사업 추진 △우주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발전된 위성들 개발 발사 △지식경제로의 전환과 대외무역의 다각화·다양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핵무력의 법적 고착과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의 질량적인 확대 강화 등 명시

나. 군사

●北, 동해서 육·해군 합동훈련…김정은 참관(종합)(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5일 동해안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육·해군 합동으로 대규모 상륙 및 상륙저지 훈련을 실시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북한은 이날까지 나흘째 김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훈련을 지도한 사실을 거의 실시간 공개해 주목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날 동해에서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와 제287대연합부대, 해군 제597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反)상륙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함.

●北 “초강경대응은 전통적 방식” 주민 독려(3/27,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야전 포병군단의 ‘1호 전투군무태세’ 진입을 선포한 가운데 북한이 주민들에게 “초강경대응은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초강경대응은 선군 조선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라며 “우리에게는 적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있다”며 주민을 독려함.
- 방송은 6·25전쟁에서 김일성 주석이 미국의 ‘항복서’를 받아냈으며 이



후에도 푸에블로호 사건, 판문점사건 등 미국의 ‘도발’을 초강경대응으로 물리쳤다고 주장함.

●北 “실제적 군사행동에 핵 선제 타격 포함” 위협(3/27, 노동신문)

- 북한은 27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과 관련,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전당, 전군, 전민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휘세력 타격을 거론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우리 군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타격계획은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미국 본토와 남조선, 조선반도 주변지역의 미제침략군 기지들과 모든 적대상물들이 우리 조준경 안에, 우리 군대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으며, 핵탄을 포함한 정밀 타격수단들이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다”며 ‘핵공격’ 가능성을 거듭 거론함.

●北 軍총참모부 새 작전국장에 리영길 前 5군단장(3/29,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에 리영길 전 5군단장을 임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 오전 0시 30분 전략로켓(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보도하면서 “작전회의에는 총참모장 현영철, 작전국장 리영길, 정찰총국장 김영철, 전략로켓군사령관 김락겸이 참가했다”고 밝힘.
- 2002년 4월 군 중장(우리의 소장)이 된 리영길은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상장(우리의 중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임.

●北 중·장거리미사일 부대 움직임 급증…軍 정밀감시(종합)(3/29, 연합뉴스)

-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부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돼 군 당국이 발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특히 장거리미사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진의 성능 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부대에서 차량과 병력의 움직임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北, 주요전력 현황 노출…기밀누설 했나(3/2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9일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긴급 작전회의 주제 사진에 북한의 주요 전력 현황이 노출돼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발행한 사진에는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작전계획도가 나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주요 전력의 현황이 일부 공개됨.
- 사진에 찍힌 주요 전력의 현황을 보면 잠수함 40척, 상륙함 13척, 소해함(기뢰전함) 6척, 보조함선(지원함정) 27척, 비행기중 1천852대 등임.

다. 사회문화

●北, 1만6천쪽 분량 새 백과사전 발간(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4년부터 발간 작업을 추진해온 ‘광명백과사전’이 완간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사전은 북한역사, 세계역사, 정치, 법, 철학, 경제, 문학예술, 교육, 어학, 출판보도, 북한지리, 세계지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정보, 조종, 나노기술, 체육 등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를 전체 20권에 나눠 담음.
- 통신은 “매권 편, 장, 절과 그에 해당하는 소제목, 분제목 등 총 5만 8천여 개의 올림말을 체계성 있게 배열했다”며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통속적으로 서술했다”고 설명함.

●北, 평양 중심부에 대형공원·지하 슈퍼마켓 건설(3/27,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중심부인 만수대지구에 대규모 화초·분수공원과 지하 슈퍼마켓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만수대지구에서 화초·분수공원 및 지하 편의상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라며 “올해 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지난달 18일 착공한 이 건설 공사는 대외건설지도국이 맡았으며 현재 굴착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신문이 전함.

●北, 올해 자동기상관측설비 80여곳 설치(3/28, 조선신보)

- 북한이 일기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평양과 지방 등 80여곳에 자동기상관측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8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자동기상관측설비는 온도와 습도, 기압과 강수량,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 기상관측에 필요한 요소들을 신속·정확하게 측정하고 전송망을 통해 해당 부문에 측정자료를 전달해 예보 활동을 개선하는데 쓰이게 된다”며 “가까운 기간에 수백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함.
- 신문은 “현재 레이더는 과거 구름 관측에 이용하던 설비에 비해 1.5배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구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며 “그만큼 예보시



간을 상대적으로 앞당길 수 있게 한다”고 덧붙임.

●北, 장애어린이 치료·교육 전문센터 개소(3/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장애어린이 치료와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인 ‘조선장애어린이회 복중심’을 개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장애어린이회복중심 개교식이 열렸으며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개교식에서 “장애어린이회복중심은 장애 어린이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요람”이라며 “장애어린이들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받으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북한 일부 웹사이트 이틀째 접속불안(3/31, 연합뉴스)

- 북한의 일부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서 31일 이틀째 일시적인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전함.
-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조선의 소리’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 안 되다가 오전 11시 30분을 전후해 정상적인 접속이 이뤄짐.
- 노동신문 홈페이지의 경우 첫 페이지가 오전 한때 접속되기도 했지만 항목을 클릭해도 내용이 열리지 않는 장애현상이 발생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북한, 중국서 은 660kg 수입...어디 썼나(3/2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銀)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28일 중국 해관(세관)에 따르면 북한은 1월 중국으로부터 661.71kg의 은을 수입했다. 여기에는 65만3천128 달러(약 7억2천600만원)가 투입됨.
- 한국 시중에서 1kg짜리 은괴가 약 130만원에 팔리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량 구매를 통해 비교적 싼 값에 은을 사들였다고 할 수도 있음.

●북한, 관광객 유치 총력...관광총국장 방중(3/28, 연합뉴스)

-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된 속에서도 북한이 관광업무 실무 책임자를 중국에 파견, 자국 관광 홍보에 나서는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2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도준 조선관광총국장이 최근 관광객 유치 활동 차원에서 중국을 찾음.



- 김 총국장은 베이징, 상하이, 산시(陝西)성 등을 돌면서 중국 지방 정부의 여유국(여행국) 관계자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두루 접촉한 것으로 전해짐.

● **캠핀스키, 北류경호텔 개장계획 보류(3/29, NK뉴스)**

- 독일 캠핀스키 호텔그룹이 북한 평양에 건설중인 류경호텔의 객실을 올해 개장하려던 계획을 ‘시장 상황’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이에 따라 자금난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류경호텔의 건설계획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짐.
-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29일 캠핀스키 그룹이 북한내 ‘시장상황’(Market Conditions) 때문에 평양에 건설중인 류경호텔 105층의 객실 개장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힘.

● **北 고려링크 “외국관광객 모바일 인터넷 사용 중단” (3/29,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부터 허용한 외국인의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한 달여 만에 중단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북한에서 독점적으로 휴대전화사업을 하는 ‘고려링크’ 관계자는 28일 (현지시간) 외국인 전용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일반 관광객 대상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교관 등 장기체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힘.
- 이집트와 북한 합작회사인 고려링크는 지난달 25일 시작한 해당 서비스를 중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 **기타 (대외 관계)**

- 최영림 내각 총리, 黃北 수안군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 정형(산림토지에서 나무와 농작물, 약초 등을 결합 재배) 현지 요해(3.21, 중통·중방)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 3.16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축전(3.14, 국가 주석 피선)에 대한 ‘中-北 친선협조 관계발전 추동’ 요지 답전(3.21,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한반도 핵문제 관련국, 전쟁·평화 입장 밝힐 때” (3/28,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한반도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실 조선반도(한반도) 핵 문제를 놓고 책임있는 나



라들이 자기의 주권을 세우고 응당한 의무를 다였다면 오늘과 같이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게 될 조미(북미)사이의 핵전쟁은 결국 양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함.

- 신문은 “지금이야말로 조선반도 핵 문제와 관련된 나라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자기의 입장과 자세를 명백히 밝힐 때”라며 “평화를 바라고 정의를 사랑한다면 그 누구든지 미제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엄중시하고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덧붙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北 “천안함 사건은 南·美 음모의 산물” 주장(3/26, 노동신문)

- 북한은 천안함 사건 3주기인 26일 이 사건이 미국과 한국이 만들어낸 ‘음모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신문은 이날 ‘46명의 생명을 제물로 삼은 극악한 음모’라는 글에서 천안함이 우리 군 등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 근해에서 침몰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괴뢰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선 침몰원인을 우리와 무작정 연관시켰다”고 주장함.
- 특히 북한을 사건 주범으로 지목한 당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혹투성이”라며 “괴뢰들은 우리가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조사는 물론 사건 현장에서 수집했다는 모든 물증을 판문점에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평가하자는 우리의 이량 있는 제안마저 마지막까지 거부했다”고 밝힘.

●北매체, 김관진 장관 연일 비난…“첫 별초대상”(종합)(3/2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대남 선전용 매체를 동원해 최근 유임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첫 별초대상이 될 것”이라며 연일 비난함.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개인필명의 글에서 “유임되자마자 기자들과 만난 김관진이 ‘응징’이 어찌고저찌고 객기를 부려댔다고 한다”며 “극악한 대결 망발을 뽐내던(지껄던) 것은 북침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흥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함.
- 이어 “2년 넘게 국방장관 감투를 쓰고 오늘의 사태를 몰아오는 데 톡톡히 한몫하고서도 계속 도발적 망발만을 늘어놓는 김관진은 그 무자비한 보복타격의 첫번째 별초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함.

●北조평통 “南 새 정권도 동족대결의 길 간다” 비난(3/26, 연합뉴스)



- 북한은 26일 남한의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일성 부자 동상 정밀타격 계획’에 반발, “남조선의 새 정권이 리명박 역적패당과 다름없이 동족대결의 길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괴뢰군부깡패들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대도시들에 정중히 모신 우리의 최고 존엄의 상징인 수령 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들을 미싸일로 정밀 타격할 계획을 짜놓았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대변인은 이어 “천벌을 맞을 괴뢰군부깡패들의 극악한 대결망동은 청와대 안방에서 풍겨내는 독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 대로 온갖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모략의 소굴들을 흔적도 없이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北, 박대통령 천안함 추모사 비난(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도발이고 주제넘은 도전”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천안호 사건 3년을 계기로 남조선 일대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26일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된 그 무슨 ‘추모식’이라는 데서 청와대 안방주인이 ‘추모사’라는 것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대변인은 “천안호 사건으로 말하면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책동에 미쳐 날뛰 리명박 패당에 의해 조작된 극악무도한 특대형 모략극으로 이미 진상이 드러났다”며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

●北조평통,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 비난(3/27,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대남기구를 앞세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유임 사실을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김 장관이 지난 25일 백령도의 해병여단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시 원점과 지원 및 지휘세력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발언 등을 언급하고 “김관진과 같은 대결 미치광이 따위를 내세워 전쟁광증을 더욱 일으키며 우리와 감히 대결해보려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주장함.

●軍통신선 끊은 北, ‘군사적 행동’ 과시 이어질까(3/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전격적으로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사적 행동 과시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통신선은 개성공단을 드나드는 남측 인원의 명단을 통보하는 채널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팩스가 아닌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의 북측과 협의를 통해 출입경 인원의 명단을 통보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해짐.
- 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전화통지문을 통해 군 통신선 단절 입장



을 전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의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계속 과시될 것”이라고 말함.

●北조평통,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 비난(3/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한국과 미국이 최근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침략전쟁포고”라며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최근 미국과 괴뢰 패당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 침략문서를 조작해 전쟁위험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매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문서로서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침략전쟁포고”라고 주장함.
- 이어 “이번 서명놀음은 서울 청와대뿐 아니라 워싱턴의 백악관도 초정밀 타격좌표에 넣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의 당위성을 더 확고히 해줄 뿐”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의 원흉 미국과 함께 친미괴뢰호전광들을 지구 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北매체, 美 B-52 격추 ‘그래픽 영상’ 공개(3/29,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가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를 격추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20일 공개함.
- 29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걱정되는 것은 남조선이다’라는 제목의 UCC동영상(4분27초 분량)에는 한반도 상공에 막 진입한 B-52 한 대가 북한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는 장면이 담겨 있음.
- 이 동영상은 “B-52는 대도시를 10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핵타격 미사일을 20개쯤 싣고 다니며 수소폭탄도 대량투하할 수 있다”며 “그것은 핵우산이 아니라 미국이 남조선에 쏟아부을 끔찍한 핵소나기”라고 비난함.

●北, 대남기구 앞세워 차대통령 비난수위 높여(3/29,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을 위협하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모략험담들이 청와대에 새로 들어앉은 안방주인의 독기서린 치마바람에 의해 우심해지고(더 심해지고) 있는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화를 톡톡히 입게 될 안방주인’이라는 글에서 “도발의 구멍수만 노리는 호전광 김관진을 군부 우두머리로 올려 앉힌 청와대 안방주인도 화를 톡톡히 당하게 될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및 6자회담

- <北 “美·南이 핵전쟁 상황 조성, 안보리에 통보” >(3/27, 연합뉴스)
 - 북한은 26일 미국과 남한의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한다고 밝혔음.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지고 다져온 선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반미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에 진입한다”고 위협했음.
 - 성명은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표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의미를 띠게 됐다”며 “지금 미국이 핵무기의 수적 우세를 믿고 허세를 부리지만 제가 지른 불길에 영영 타죽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또 남한 정부를 겨냥해선 “상전의 핵우산을 믿고 멋없이 날뛰는 괴뢰들은 조미 사이에 싸움이 터지게 되면 핵타격의 곁불이 어떤 것인지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
 - 성명은 미군 B-52 폭격기가 전날 남한 상공에서 북한에 대한 핵타격 연습을 했고 한미 양국이 전면 핵전쟁을 감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꾸며냈다고 비난했음.
 - 북한 외무성이 ‘핵전쟁’을 경고한 성명을 내놓은 것은 군 최고사령부 성명에 이어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전략 미사일 부대와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발표
- <안보리 “北 ‘핵전쟁’ 서한 접수…조치는 없을 것”>(3/2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음을 경고하는 북한의 서한을 접수했지만 이와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27일(현지시간) 밝혔음.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미국과 남한의 도발행위로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조성됐음을 항의하는 북한의 공식 서한을 접수했다고 공개하면서 “이 서한을 이사국들에



- 회람시킬 것”이라고 전했음. 러시아는 3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임.
- 추르킨 대사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문제와 관련한 서한들을 몇 통씩 받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서한들을 정보 차원에서 이사국들에게 회람 시킨다”고 덧붙였음. 일상적인 행정적 절차만 취할 뿐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 등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
 - 북한은 26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 공개통고한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지고 다져온 선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반미 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에 진입한다”고 위협했음.
- <北 “한반도 핵문제 관련국, 전쟁·평화 입장 밝힐 때”>(3/28,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한반도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음. 노동신문은 이날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실 조선반도(한반도) 핵 문제를 놓고 책임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주권을 세우고 응당한 의무를 다였다면 오늘과 같이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게 될 조미(북미)사이의 핵전쟁은 결국 양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신문은 “지금이야말로 조선반도 핵 문제와 관련된 나라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자기의 입장과 자세를 명백히 밝힐 때”라며 “평화를 바라고 정의를 사랑한다면 그 누구든지 미제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엄중시하고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음.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 관련국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은 최근 ‘말로 할 때가 지났다’며 군사력 과시를 공언한 것과 달리 유화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옴.
 - 특히, 핵전쟁이 미국과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언급은 그동안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임. 그러나 노동신문은 이날 다른 글에서는 “전면적인 대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퍼부을 첫 타격대상, 중심과녁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라며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이어갔음.
- <北, 김정은 시대 국정목표로 ‘경제·核 명시’>(3/3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국정목표가 ‘경제 살리기’와 ‘핵 억제력 추구’라는 점이 명확해졌음.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31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을 통해 안보를 다지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내부적 불만을 잠재우는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설정한 셈임.



- 재래식 병력 규모와 기술력에서 남한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이를 일거에 균형적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핵무기 등 WMD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특히 재래식 무기는 개발과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WMD는 큰 비용 없이도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음.
-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고 밝혔음.
-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노선 확립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졌다는 점. 회의에서는 “선군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달러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라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전지구적 차원의 핵군축 차원에서만 핵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재확인했음.

나. 미·북 관계

- <미 국무부, “북한과 건설적 접촉 준비 돼 있어” >(3/25, 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건설적인 접촉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국무부의 한 관리는 22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은 대북 관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전했음.
 - 이 관리는 그러나 북한이 최근 해외 주둔 미군 해군기지들과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긴장과 위협 수위를 높이기 위해 호전적 수사와 협박을 가하는 북한의 전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음.
 -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괌,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군기지가 정밀 타격 범위 내에 있다고 위협한 데 이어, 22일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주한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잡는다는 내용의 동영상 인터넷에 배포했음.
- <북, “미군기지를 겨냥한 공격준비 명령 하달”>(3/26, 로이터)
 - 북한은 화요일 미군의 폭격기가 자신들을 위협할 경우, 전략로켓과 장거리 포병부대가 미국 본토는 물론, 하와이와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도 즉각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음.
 -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달 초 한미연합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시작되면서 발표된 최근의 위협발언을 상기시키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음.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 “임박한 도발의 징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



- 혔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전군에 1호 전투태세 진입 명령을 하달한다”는 조선인민군 성명을 전하면서 (이 명령이) “미국의 침략 전진 기지인 미국 본토와 하와이, 그리고 괌을 포함하는 모든 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포병부대와 전략로켓을 포함한다”고 밝힘.
 - 북한은 그들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계속하고 있음. 그러나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음.
 -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이상동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미 양국군은 4월말까지 합동지휘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갖기로 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B-52 폭격기가 한미 양국 합동 훈련의 일환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데 대해서 “미국이 B-52를 이용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군에 대한 공격 위협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협정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하는 등 연일 위협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음.

● <미군 B-52 전략폭격기 이달 3차례이상 한반도서 훈련>(3/26, 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52가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서 모의 폭격훈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군 소식통은 26일 “어제 괌에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다”며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음.
- 미 공군의 주력 폭격기인 B-52는 이달 들어 3차례 이상 한반도로 출격해 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이례적으로 출격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됨.
- 지난 19일에는 오전 8시 전후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가 강원도 영월 소재 필승사격장에 세워진 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복귀하기도 했음. B-52는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천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 6천km에 달한다.
- B-52는 최대 상승고도는 5만 5천ft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며 2천파운드(약 907kg)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을 장착할 수 있음. 특히, B-52는 사거리 200~3천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미측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핵우산 역할
- 한편, 미측 핵우산의 3대축으로는 B-52 등이 보유한 공대지 핵미사일



(ALCM)과 핵잠수함에 탑재된 잠대지핵미사일(SLBM), 미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수 있음.

● <미 하원, 북한 규탄 결의안 또 발의>(3/27, 미국의소리)

-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법안과 결의안들이 미 의회에 계속 발의되고 있음. 뉴욕 주 출신의 리처드 해나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북한이 추가 도발과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정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 결의안은 북한이 그동안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도발 행동을 자행해 온 사실을 지적,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와 1695호(2006년), 그리고 1874호(2009년) 위반이라는 것임. 또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위반이라고 밝혔음. 결의안은 이어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수사로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채택한데 반발해 지난 7일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주장했음. 북한은 이어 11일에는 지난 1953년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파기를 위협했다고 결의안은 밝혔음.
- 이에 따라 결의안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행동과 위협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전략적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음. 결의안은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당사국들에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

● <미국 “북한, 위협과 도발로 아무것도 성취 못해”>(3/27,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한데 대해 “그런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밝혔음.
-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지도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앞서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이 제기한 각종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평화를 해치는 위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미국 “북한과의 별도 소통 채널 아직 살아있어” >(3/28,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이 남북 군사 통신선을 끊은데 대해 북한·미국 사이의 소



통 채널은 아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음.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남은 남북 소통 채널인 군사 당국 간 통신선을 단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의 소통 수단이 별도로 있고 이를 위한 채널도 있다”고 설명했다.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됨.
- 벤트렐 부대변인은 “이 채널은 아직 살아 있다”고 덧붙였음.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북한과 건설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은 2005년 비핵화 공동성명과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현안을 다뤄야 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북한이 합의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이 전제돼야 대화나 협상 등이 가능하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벤트렐 부대변인은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와 도발적인 위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도로, 철도, 교량 등 북중 간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특정 지방 정부 결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중앙 정부에 미국의 우려를 반복적으로 전했고 중국도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 등을 관찰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내 동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본토와 동맹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부연했음.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발적 언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전날 설명을 되풀이해 강조

● <스텔스폭격기 B-2 2대, 한반도서 폭격훈련 첫 확인>(3/28, 연합뉴스)

- B-52를 대체하는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 2대가 28일 한반도로 전개돼 폭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음.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전날 밤 출격해 B-2 폭격기 2대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1만 500km를 비행, 이날 정오를 전후해 한반도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한 뒤 복귀
- 한반도에 도착한 B-2 폭격기 2대는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 훈련탄을 투하했음. 오산 공군기지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연합뉴스에 포착됐음.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핵무장이 가능한 B-2가 한반도에 전개돼 폭격 훈련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 전략사령부 소속 B-2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방어를 위



한 실기동훈련(FTX)인 한미 연합 독수리(FE) 연습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B-2가 미 본토의 기지에서 발진, 공중급유까지 받으며 한반도에 날아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함께 핵억제 투발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북 메시지로 풀이됨.
- 이날 훈련은 북한이 지난 26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등에 대한 공격 위협을 가한 데 대응한 대북 무력시위성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됨. 주한미군 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장거리 왕복 임무차 B-2 폭격기 2대가 한국으로 전개됐다”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역량과 공약을 과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미군 측은 “미국은 적의 침략을 억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역내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다”며 “B-2 폭격기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확장억제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 구성요소”라고 설명했다.
- 북한은 이번 B-2 폭격기 훈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978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B-2는 1989년 처음으로 시험비행을 했고 1993년부터 미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해 2003년 22대 전력화가 완료됐음. 미 공군의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가 있는 괌에는 2009년 3월 처음으로 배치.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극소화하고 엔진에서 나오는 적외선 방출을 억제하는 스텔스 원칙에 충실한 항공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B-2는 스텔스 폭격기이면서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JASSM 16발, GPS형 관성유도 폭탄인 JSOW 16발, 합동정밀직격탄인 JDAM 80발 등 가공한 무장을 갖추고 있음. 특히 총 중량 1만8천144kg에 달하는 핵폭탄 16발을 탑재할 수 있음.
- 군 관계자는 “B-2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며 “북한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만한 전략무기”라고 평가했음.

● <미국 “B-2 폭격기 한반도 훈련은 방어용” >(3/2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B-2(스피릿) 폭격기 2대가 한미 연합 독수리(FE) 연습에 참가한 것은 방어용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본질적으로 방어 목적의 군사 훈련을 한국과 연례적으로 해왔으며 B-2 폭격기를 포함한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B-2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 방공망에는 새처럼 작은 물체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불리며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꼽힘. 어니스트 부대변인은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이 물리적 충돌이 아닌 외교



적 방법으로 긴장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과 워싱턴DC의 미국 외교관들도 이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B-2 폭격기 등 전략 무기 출격은 서부 해안의 미사일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나라라도 북한처럼 말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믿을 만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른 길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지키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럴 때까지는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내달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기 앞서 이들 국가 외교장관 등과 통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놀런드 대변인은 “(북한 현안과 관련해) 지난 몇 주간 긍정적인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다.

● <北김정은, 작전회의 긴급소집...“미사일 사격대기” 지시>(3/2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김 제1위원장이 심야에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북한 언론매체가 신속히 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그는 긴급회의에서 “아군 전략로켓(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미사일 기술준비 공정계획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 제1위원장은 “미제가 남조선 상공에 연이어 스텔스 전략폭격기 B-2A까지 발진시킨 것은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 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진입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최후통첩”이라며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진입에 맞서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언제든 실전 발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됨.
- 그는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날 회의에는 현영철 총참모장, 리영길 작전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겸 부총참모장, 김락겸 전략로켓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전투태세 진입' 북한에 자제 촉구>(3/26,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6일 "우리는 관련국들이 자제하는 가운데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선포하면서 긴장도를 높인 것과 관련해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잡,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음.
- 한편, 홍 대변인은 미국이 최근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에 중국이 왜 반대했느냐는 물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답했음.

● <북한, 관광객 유치 총력...관광총국장 방중>(3/28, 연합뉴스)

-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된 속에서도 북한이 관광업무 실무 책임자를 중국에 파견, 자국 관광 홍보에 나서는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2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도준 조선관광총국장이 최근 관광객 유치 활동 차원에서 중국을 찾았음.
- 김 총국장은 베이징, 상하이, 산시(陝西)성 등을 돌면서 중국 지방 정부의 여유국(여행국) 관계자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두루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음. 김 총국장은 4월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본격적인 여행철에 중국 관광객을 많이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음.
- 김 총국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평양과 중국 각지를 오가는 전세기 증편과 관련한 협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음.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평양~베이징, 평양~선양 정기편이 있음. 북한과 중국은 북한의 여행 성수기인 여름철을 전후해 수요가 있으면 시안(西安), 상하이 등지에서 전세기를 띄우고 있음.
- 한 소식통은 "일각에서는 김 총국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여행객을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도 있는데 여행객 유치가 주 업무인 김 총국장이 다른 말을 했으면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말했음. 아울러 북한은 중국 외에도 미국, 유럽, 대만, 싱가포르 등의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음.
- 한편, 북한에서 여행 산업은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창구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음.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극도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여러 코스의 외국인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호주,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 동참>(3/26, 연합뉴스)
 - 일본과 호주가 북한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of DPRK) 제재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이들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26일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앞으로 2~3주 뒤에 조선무역은행 제재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그 은행이 일본에 지점을 개설하지 않은 만큼 평판 측면에서 불이익을 최대한 주는 것이 이번 행동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호주 외교부 관계자들은 조선무역은행이 호주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재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며 곧 제재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호주 사이에는 외교 관계가 있지만 북한과 일본은 그렇지 않음.
 -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조선무역은행을 제재하면 북한 외교관들이 대량의 현금을 직접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현금 수송이 탄로 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음.
- <‘일본 정부, 대북 제재 2년 연장키로’>(3/28, 미국의소리)
 -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와 수출입 금지 등의 제재를 2년간 연장키로 했음.
 - 일본 정부는 제재 기한이 만료되는 내달 13일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재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음. 지금까지는 제재 조치 연장 여부를 1년마다 결정했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갱신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일본에서 북한으로 약 7억 3400만 엔의 현금이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9일 도쿄에서 일본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음.

마. 기타

- <“미국, 조선무역은행 제재에 EU 동참 희망”>(3/2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외국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 유럽연합(EU)이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 미국 국무부 관리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조선무역은행의 제재 결정은 매우 큰 문제고 우리는 EU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는 중전에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작고 고립돼 있어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생각을 바꿨다면서 “북한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부세계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다만 북한에 대사관을 둔 몇몇 EU 국가가 이 은행을 대사관 업무에 필요한 계좌로 사용하고 있어서 EU가 이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복잡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음.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외국환 결제 은행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으나 미국은 이 은행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했음.
-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 20일 외교통상부의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이행 방법을 논의한 자리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에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측과 제재 이행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EU도 북한에 대한 독자적 추가 제재를 곧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현재 EU는 북한 은행이 유럽에 새 지점을 열거나 유럽 은행이 북한에 새 지점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음.

● <유엔 무기거래조약, 북한·이란 반대로 합의 무산>(3/29, 연합뉴스)

- 유엔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막으려고 추진한 무기거래조약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북한, 시리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음. 유엔 193개 회원국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무기거래조약 회의를 열어 700억~800억 달러(약 78조~89조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이 조약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만장일치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세 나라가 조약이 자국을 방어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음.
- 이에 따라 무기거래조약을 통과시키는 일은 다음 주에 열릴 유엔 총회로 넘어갔음. 총회에서는 3분의 2의 찬성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면 조약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
- 모함마드 카자이 이란 대사는 조약 초안이 “자주국방의 고유한 권리, 즉 압제에 맞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음. 또 반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음.
- 북한 측 역시 “주요 무기 수출국이 정치적으로 휘둘러 위협이 있는 초안”이라고 지적했음.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혹 때문에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이며, 시리아는 2년 넘게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음.
- 세계 각국은 7년 전부터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조약을 추진해왔음. 이날은 조약 채택을 위한 회의 마지막 날이었음. 이란 등이 반대해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멕시코 등 몇몇 나라는 ‘합의(consensus)’



의 명확한 정의가 없으면서 조약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러시아가 반발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지난해 7월에도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패로 끝났음. 유엔 총회는 이날을 합의 시한으로 못 박았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것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애덤슨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실패가 아니다. 오늘 성공이 이뤄지긴 했지만 오래 연기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음.
- 조약 초안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음.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함. 조약이 통과된다면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이 될 것으로 평가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윤병세 내달 2일 방미...워싱턴·서울서 연쇄 외교회담>(3/26,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다음달 11일께 방한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2일 미국을 방문. 이에 따라 한미 외교장관이 불과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회담을 갖게 됐음. 새 정부 출범과 5월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안보위기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연쇄 회동은 매우 이례적
-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의 초청에 따라 윤 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윤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 및 학계 인사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윤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케리 장관과 회담을 하고 5월 상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양자 현안,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예정임. 윤 장관의 방미 뒤 케리 장관은 한·중·일 3국 순방차 다음달 11일께 서울을 찾을 예정임.
- 양국은 워싱턴과 서울에서의 연쇄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조율을 할 것으로 분석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이견이 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큰 틀의 원칙을 세울 가능성이 있음.
- 또 올해 협상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됨. 한미 외교장관은 대북정책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 양국 간에는 독수리 훈련이 종료되는 다음달 30일 이후의 한반도 정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



으로 전망

- 우리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조성 차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측에 이런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북한의 춘궁기와 맞물린 인도 지원이 성사될 경우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현재의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서서히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
- 윤 장관의 방미에는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수행. 임 본부장은 윤 장관을 수행하면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별도로 만날 예정임. 차관급인 그가 장관 방미를 수행하는 것도 이례적임.
- 한편, 한국을 방문중인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찾아 김규현 1차관과 이백순 북미 국장과 만났음.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원자력협정과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와 함께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윤 차관보 대행은 한·중·일 순방차 전날 방한했으며 27일 출국

● <李 前대통령 내달 방미 검토…부시 초청받아>(3/26,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달 말 미국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되면 지난 2월25일 퇴임한 지 두 달 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방미 일정으로 시작하는 셈임.
-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시 전 대통령기념관 헌정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인원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다음 달 말께 ‘아들 부시’로 불리는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 헌정식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서던메소디스트 대학에서 열릴 예정. 특히, 이 자리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대통령과 각료, 부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부시 전 대통령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질지 주목됨.
- 이 전 대통령 측은 행사 초청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정치 명문가인 부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계와 인적 네트워크도 두텁게 할 기회로 보고 있음. 이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손발을 맞춰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의를 과시하기도 했음.

● <한미 국방장관 통화…“北 도발시 강력 대응”>(3/28, 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도발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 헤이글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 세계 주요국의 안보 수장과 잇따라 면담 또는 전화 통화했으나 한국은 북한 핵실험 강행 등 최대 당면 현안이 있음에도 김병관 전 장관 내정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접촉하지 못했었다. 김 장관과의 통화에서 헤이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상요격 시스템과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을 증강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 헤이글 장관은 이르면 5월 방한, 김 장관과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군사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장관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지난 22일 서명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북한 국지도발에 대한 양국 공동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
 - 양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한반도와 지역, 세계 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의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 헤이글 장관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서로 취임 및 유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긴밀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내 만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미국 국방부도 현지시간으로 27일 저녁 조지 리틀 대변인 명의의 보도 자료를 내고 “헤이글 장관이 김 장관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특히 고조되는 시점에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변함없는 방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동맹의 힘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리틀 대변인은 “헤이글 장관은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이끄는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리더십에도 강한 신뢰를 보였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김 장관이 한국 국방장관 최초로 두 대통령을 보좌함으로써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리틀 대변인은 덧붙였다.
- <“원자력협정, 5월 한미정상회담 전후 ‘원-원’ 강구”>(3/28, 연합뉴스)
- 북한이 연일 강경노선으로 치달으면서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28일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전문가들도 과거에는 북한에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 사이클이 안 보인다고 말한다”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음.
- 그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하나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균형 감각을 갖고 보려 한다”고 덧붙였음.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의도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결론 내리긴 어렵다”면서 “북한의 의도와는 별개로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된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사용한 원료가 우리늄인지 플루토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은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지겠지만, 안보에 위해가 되는 방식으로 실험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2년 정도 협상해 온 틀이 있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을 전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인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이 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이 추진 중인 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초기 협의과정과 채택과정에 모두 동참했다”면서 “새 정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중요한 만큼 인권향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다짐했음.
 - 이밖에 한미중 전략대화과 관련, 민간차원의 한미중 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 그는 주일미군의 역할 등 일본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호혜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중국군,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우려 표시>(3/28,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중국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음. 중국 국방부 양위권(楊宇軍) 대변인은 28일 월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해 반도 정세의 완화와 지역 평화·안정 수호에 더욱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기 바란다”고 밝혔음.
 - 이는 한미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마련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가 복잡, 민감하다”는 전제에 이어 내놓은 발언임. ‘평화와 안정에 더욱 유리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은 평가 대상이 된 나라가 평화·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낼 때 중국 당국이 자주 쓰는 표현
 - 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한미의 강한 대처가 북한의 추가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반복해 고조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음. 양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중 국경에 배치된 부대가 방어를 강화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 답변을 하는 대신 “중국은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관련국들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국 해군이 최근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강화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같은 항상 같아야 하고, 군사는 항상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 해군의 최근 훈련은 연례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 중국이 올해 미국이 주도하는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 실무진이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해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림팩은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림팩 참가를 중국에 요청했다.
- 한편, 양 대변인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러를 전후해 중국과 러시아가 수호이(Su)-35 전투기와 라다급 잠수함 거래 계약을 체결했는지 묻고 보도에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현재 중러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은 건강한 발전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 한·일 관계

- <“美, 中·北 위협에 韓·日 관계회복 독려”> (WSJ) (3/26,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서히 양국 관계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인당하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단합된 동맹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북한도 핵개발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마저 삐걱대면 위협 상황을 타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임. 실제 한일 관계는 올 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로 취임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 지난달 말 박 대통령의 취임식 때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가 30여명의 의원, 3명의 전 총리와 함께 참석.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 유엔이 새 제재를 마련하는데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 한·중·일 3국이 26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관계 정상화 토대가 앞으로 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주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협력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증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 이런 언급들은 지난해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특히 서로 비난하며 내뱉었던 거친 수사(fiery rhetoric)를 고려하면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음.
- WSJ는 이렇듯 양국의 신뢰 재구축 노력에 미국 관리들이 물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일례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가 급히 일본으로 날아간 일화를 소개했음.
- WSJ는 소식통을 인용, “캠벨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일본 측에 한국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해빙의 조짐 이면에 심각한 적대감도 여전하다고 WSJ는 지적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려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국 관계는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도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이 서로 신뢰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관적 견해를 보였음.

● <정부, 日교과서 역사왜곡 항의…“결코 용납못해”>(3/26, 연합뉴스)

-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일본의 고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조 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여전히 일본 영토로 부당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
- 그는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에 기초하지 않은 교과서는 결국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한일 간 과거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 정부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날 오



후 외교부 청사로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할 예정임.

● <일본 외교청서 초안, 또 “독도는 일본 땅” 명시>(3/28, 연합뉴스)

- 일본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가 올해에도 독도가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이 27일 입수·보도한 ‘2013 외교청서’ 초안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음.
-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 시절인 지난해 외교청서에 명시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한 것과 유사. 외교청서 초안은 아울러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고 적시했음.
- 초안은 이어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대한 중국 해군 구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 등 지난해 8월 일본의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된 중국과의 갈등 상황도 담았음.
- 또 “미군의 전력을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해 일본·미국 안보체제의 역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적었음. 이와 함께 일본이 최근 협상 참가 방침을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강한 협상력으로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 초안은 미국에서 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셰일가스 획득 등을 위한 전략 수립을 향후 과제로 꼽았음. 외교청서는 주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임.

● <정부 “日, 우리 고유영토에 부당한 주장안돼”>(3/28, 연합뉴스)

-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28일 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우리 고유의 영토에 있어서 부당한 주장을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청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역사 문제와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 일본은 지난해 4월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발표했으며 당시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음.
- 조 대변인은 또 리비아 당국이 불법 선교활동 혐의로 지난달 체포한 한국인을 석방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해당 보도에 인용된 발언자를 접촉했는데 개인 의견 표명이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리비아 당국



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라. 미·중 관계

- <오바마, 아프리카 4개국 정상 초청..중국에 맞불>(3/2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과 세네갈, 말라위, 카보베르데 등 아프리카 4개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 회담을 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프리카 순방에 맞불을 놓는 성격으로 풀이됨.
 - 이번에 초청된 4개국 정상은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 호세 마리아 페레이라 네베스 케이프베르데 총리 등임.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정상과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강화 방안과 무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도 ‘아프리카 외교’를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한 건설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억 인구에 풍부한 자원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양상. 미국은 그동안 국내정치와 중동문제 해결에 치중하느라 아프리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 하지만 중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투자를 비약적으로 늘려 최대 교역국이 됐다. 지난해 중국과 아프리카 각 국간 교역액은 2천억 달러에 달함.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음.

마. 미·일 관계

- <“미·일, 5월 사이버공격 공조방안 협의”>(3/28,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5월 도쿄에서 사이버보안 문제에 관한 첫 포괄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음.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중국 등을 발신지로 하는 사이버 공격을 안전보장상의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 경제와 안보, 기업정보, 인프라 방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와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
 - 오바마 정권은 일본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경제와 주일미군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포괄 협의를 통해 동맹국 일본에 모든 측면에서 대비를 서두르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틀 안에서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의 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됨. 첫 포괄 협의에는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페인터 국무부 사이버문제 조정관을 비롯한 국방부, 국토안전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일본에서는 이마이치 오사무(今井 澁) 외무성 사이버정책 담당대사와 방위성, 총무성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



바. 미·러 관계

- <백악관 보좌관, 내달 러시아서 동유럽MD 등 논의>(3/26, 연합뉴스)
 - 토머스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사일 방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25일 모스크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런 보좌관이 4월 모스크바에 도착한다”고 밝혔음.
 - 우샤코프 보좌관은 도널런 보좌관이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와 자신을 만날 것이며 푸틴 대통령 면담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이 오바마 행정부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축소 계획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도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에 앞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음. 그는 이를 위해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미사일 방어망 개발비 10억 달러를 알래스카 요격미사일 배치 비용과 첨단 미사일 탄두 개발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센카쿠 등 분쟁지역 위성 감시 계획>(3/26, 연합뉴스)
 - 중국이 올해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와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岩島) 등 분쟁 해역을 위성 감시한다고 홍콩 문화보(文匯報)가 26일 보도했음. 중국 국가해양국이 최근 내놓은 ‘2013년 해역 동태 감시측량 중점 업무 준비’안에 따르면 국가해양국은 올해 중국 전체 근해 해역에서 30m 해상도로 두 차례 위성 원격감시·측량을 실시하게 됨.
 - 또 센카쿠와 황옌다오 등 분쟁 지역에서는 한 차례 2.5m 해상도로 위성 감시측량을 실시할 예정임.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관할 해역을 위성 감시 범위에 포함한다는 계획
 - 이밖에 국가해양국은 랴오닝(遼寧)성과 장쑤(江蘇)성, 하이난(海南)성 해역에 무인기 감시측량기지를 세우고 실시간으로 원거리 영상 전송을 강화하며 분쟁도서 행정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썬사(三沙)시에도 해역 동태 감시측량관리 시스템을 건설할 예정
- <“센카쿠서 예측불능 사태도”...일 방위연구소 보고서>(3/29,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는 29일 동아시아지역의 안보·군사 정세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예측 불능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음.
 - 연차보고서(‘동아시아 전략 개관 2013’)는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의 영해 침범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상당한 초기 단계부터 센카쿠 영유권 주장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예측불능의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중·일 당국자 간 정례회의 개최를 제안했음.

-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군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핵소형화에 성공하면 위협은 심각해진다”고 내다봤음.
- 보고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그의 과거 언동 검증을 토대로 “공산당 통치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정치가”라고 분석했음.

아. 중·러 관계

● <시진핑 러시아 방문 마무리...어떤 성과 있었나>(3/25, 연합뉴스)

- 시 주석은 방러 기간에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적 세계 질서를 견제하는 균형추로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굳건히 하고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30여 가지의 각종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등 실리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몇 년 동안 끌어온 러시아산 가스의 중국 수입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은 큰 성과로 주목받고 있음.
- 막 입기를 시작한 시 주석과 지난해 3기 집권의 막을 올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양자 관계는 물론 국제 현안에서 양국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 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밀월을 누려오던 러-중 관계는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으로 한층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 시 주석은 방문 첫날인 22일 크렘린 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시 주석을 맞은 푸틴 대통령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첫 번째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택한 것은 두 나라가 상호 관계 구축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음. 푸틴은 이어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롭고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시 주석도 자신의 방문 목적이 양국 관계의 추가적 강화와 두 나라의 포괄적 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이라고 화답. 시 주석은 “오늘날 중-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며 “러시아를 방문한 주요 목적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음.
- 시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중-러 관계가 전혀 없는 최고 수준에 달했다”면서 “두 대국 간 조화로운 공존관계 수립을 위해 영토주권을 비롯한 핵심적 이익을 지지하고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에 푸틴도 “러-중은 여러 중대 문제에 대한 시각이 일치한다”며 “양국이 국가발전 진흥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동 이익과 협력 범위를 넓혀



- 나가야 한다”고 회답했음. 시 주석은 방러 이틀째인 23일 외교관 양성 전문학교인 현지 명문대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를 찾아 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도 중-러 협력의 국제적 의미를 강조했다.
- 그는 “중-러 관계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고 “이는 양국 관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세계 균형의 보장책”이라고 주장했다. 중-러 협력이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서방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균형추 구실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었음.
 - 첫날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부 관계자 및 국영기업 대표 등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30여 가지의 협력 문서들에 서명. 대표적인 것이 몇 년을 끌어온 가스 협상 타결이었음.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가스관을 이용한 러시아 천연가스의 중국 공급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러시아와 중국은 그동안 가스공급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도 가격에서 큰 이견을 보이면서 몇 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음. 중국 측이 1천m³당 250달러를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300달러 이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처럼 교착 상태에 빠졌던 가스 협상이 시 주석의 방러로 극적 돌파구를 찾은 것임. 경제 팽창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 성과. 본격적 개발 단계에 있는 동시베리아 가스의 판로 모색에 고민해온 러시아로서도 안정적 시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역시 반가운 일임.
 -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은 “동부 노선 가스관을 건설해 2018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380억m³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 공급량이 600억 m³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 노선’은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가스관 노선을 의미함.
 - 밀레르 사장은 오는 6월 법률적 조건들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연말까지 가스 장기 공급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중이 가스 협상을 타결 지음으로써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으려던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음. 중국이란 판로를 확보한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석유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왔음.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티와 CNPC가 선불 조건부 원유 공급 확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임. 이 협정에 따라 로스네프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공급량을 현재의 연 1천500만t에서 3천100만t까지 단계별로 늘릴 계획임.
 - 대신 로스네프티는 25년간 중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기로 했음. 이밖에 양국 정부는 중국 텐진에 연 1천300만t 가공 능력의 원유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협정에도 서명
 - 시 주석 방러를 계기로 두 나라의 군사 협력도 크게 확대될 전망. 시



- 주석이 외국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국방부의 두뇌 격인 작전 통제센터를 방문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로 평가됨.
- 시 주석은 둘째 날인 23일 러시아 국방부를 찾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과 면담하고 나서 작전통제센터를 둘러봤음. 작전통제센터는 육해공군과 항공우주군은 물론 핵전력을 지휘하는 러시아 국방부의 중추 기관이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센터를 찾은 시 주석에게 “당신이 러시아 국방부 작전통제센터가 문을 열어준 첫 번째 외국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가 시 주석에 자국 국방력의 핵심센터를 보여주는 특혜를 베푼 것은 중국과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됨. 실제로 쇼이구 국방장관은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 양국의 국방 및 군사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었지만, 이후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 무기를 복제해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고 양국의 대형 무기 거래가 사실상 끊어지다시피 했음. 시 주석의 이번 방러는 이 같은 국방분야의 불신 분위기를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음.
 - 최근 미국이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유럽과 동북아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및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러-중 군사 협력을 재촉하는 요인이 됐음. 당장 중국과 러시아는 SU-35 전투기의 최신판인 SU-35MB의 대량 거래 협상을 막판 단계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15억 달러 규모의 SU-35 전투기 24대 거래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 이 밖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 일류신(IL)-76 수송기, 아무르급 잠수함 등의 무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기타

- <일본 학계, ‘중국 견제’ 대만관계법 제정 건의>(3/25, 연합뉴스)
 - 일본 학계가 대만과의 외교 및 안보분야 공조 강화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음. 일본 전문 학자들로 구성된 ‘일·미·대만 안전보장 문제 연구회’는 24일 이 건의서에서 일본·대만관계기본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25일 전했다.
 - 이는 일본 정부가 대(對) 중국 견제 차원에서 최근 대만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는 상황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연구회는 대만이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
 - 연구회는 “일본 정부가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직시하고, 대만과의 협력이 일본 선박의 해상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등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 이 단체는 “주변 해상항로를 장악하고 남중국해의 요충지인 대만을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은 일본의 운명과 미·일 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학자들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과 무기 판매 조항을 담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사례를 들었음.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대만해협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공식 중단했음.

● <중국, 베트남 어선에 충격...영유권 분쟁 고조>(3/26,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에 발포, 양국 사이의 긴장이 크게 고조됐음. 베트남통신(VNA) 등은 26일 외교부를 인용, 중국 선박이 지난 20일 영유권 분쟁도서인 파라셀 군도(호양사, 중국명 시사군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에 충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 르엉 타잉 응히 외교부 대변인은 이 사건으로 피격 어선의 선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중국 선박은 당시 베트남 어선과 추격전을 벌이다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음. 베트남 어선에 충격을 가한 중국 선박 유형과 소속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 응히 대변인은 베트남 어선이 전통 어장에서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벌이다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는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손실을 입힌 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난했음. 이 사건은 특히 양국 간 해상분쟁의 해결방향을 제시한 국제법 원칙과 협정을 심각하게 파기한 것으로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취지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응히 대변인은 지적했음. 따라서 중국 당국이 해당 사건을 조사, 엄격히 처리하고 피해 선원들에게는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베트남 외교부는 전날 하노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외교문서를 전달하고 공식 항의. 이에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견해를 피력했음.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사군도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자체 확인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어선에는 어떤 손실도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
- 홍 대변인은 “중국은 시사군도와 관련,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베트남이 철저한 조치를 해 어민의 교육,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막아야 한다”고 역공을 폈음. 홍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의 어떤 선박이 베트남 어선에 충격을 가했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지는 않았음.
- 중국은 최근 수년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쯔엉사, 중국명 난사군도) 등 분쟁도서 해역에 해양감시선(해감선)을 동원, 순찰활동을 강



화해왔음. 중국은 지난 1974년 당시 남베트남(월남) 병력이 주둔하던 파라셀 군도의 일부 섬을 무력으로 장악한 이후 이곳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음. 특히, 최근 들어 이들 분쟁도서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자 주변국들을 겨냥한 중국의 영유권 공세도 한층 강화되고 있음.

● <美와는 전략동맹...中과는 인문유대>(3/27,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외교를 펼칠 전망이다. 외교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는 이런 전략이 반영돼 있음.
- 외교부는 체결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강화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한미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관계는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백본(backbone)이란 표현에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안보환경을 생각하면 한미간의 공동대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미관계의 증점사항으로는 ▲ 오는 5월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첫 방미와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 ▲ 북핵 문제, 한반도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정책적 협력 심화 ▲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등 현안의 원만한 해결 등이 꼽혔음.
-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는 한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인문유대’를 강화할 방침. 특히, 유교, 한자 등 양국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토양을 바탕으로 양국민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늘림으로써 유대감과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복안
- 외교부 당국자는 “인문유대를 통해 한중간 정치·경제 사이의 괴리와 안보문제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외교의 큰 분야로서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문제 등 정치·안보분야에 대해서도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의 급을 높이거나 다양화함으로써 ‘전략적 소통’도 강화할 방침
- 다만 정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던 ‘한미중 3자 전략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 1.5트랙(민·관 공동)에서 덜 민감한 의제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1트랙(정부간)에서 안보 분야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임.
- 정부는 독도, 과거사 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음. 역사문제 등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임.



-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사 문제로 지난해 상당히 높은 파고를 거친 양국 관계는 현재도 협력의 배를 띄우기에는 파고가 높다”면서 “과거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협력 분야는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 새 정부의 대(對)유라시아 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는 중요한 포인트임. 외교부는 한·러 간 협력의 큰 틀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는 등 상생·공영의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음.

● <“중국·일본, 한·중·일 FTA에 다른 선택으로 접근”>(3/27,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각국이 각각 다른 선택으로 FTA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긴장과 경쟁의식, 의심이 드리워진 세 나라 관계 속에서 한·중·일 FTA에 참여하는 중국의 의도는 이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 스인홍(時翊弘)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맞서고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일본과의 FTA와 중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음.
-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일본이 3국 FTA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지역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면서 이번 FTA 협상의 최대 승리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하마 노리코(浜矩子)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경제학 교수는 “(한·중·일 FTA가) 일본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참가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분석. 하마 교수는 “이번 회담에 등을 돌리는 것은 일본이 완전히 미국 편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한국과 중국에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 측은 서울에서 열리는 1차 협상에 대해 ‘협상을 위한 협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한 한국 관리는 1차 협상에서는 “향후 협상의 범위와 의제, 절차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하마 교수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 그는 중국이 2010년 영토 분쟁으로 비롯된 외교 갈등 이후 일본 등에 희토류 공급을 중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식의 일들이 또다시 합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이번 3국 FTA 협상은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며



중국과 일본에서 차례로 2, 3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